

한미 이번주 워싱턴서 2+2 통상협의를키로

최상목 부총리·안덕근 장관 23일 미국행

미측 협의 제안…방위비·LNG 등 협상카드

정부가 이번주 중 미국 측과 통상 문제 관련 고위급 협상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출국해 다음주 중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측과 2+2 통상협

의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 장관이 참석하고, 미국 측에서는 스톡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

표부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는 미국 측의 제안에 의해 이뤄지게 됐으며, 세부 일정 및 의제는 미국 측과 조율 중이다.

미국은 지난 9일부터 우리나라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관세 발효 하루만인 10일 상호관세 적용을 90일 동안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적용키로 했다.

시간을 번 우리나라의 협상 카드로는 방위비 분담금,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 및 구매, 조선업 협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안 장관은 “선불리 협상을 타결하 기보다는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양국이 호혜적으로 풀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

한대행, 대선 출마 여부에 “아직 결정 안 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20일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노코멘트”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영국 언론사 파이낸셜타임스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 국정 운영 및 안보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인터뷰했다.

한 대행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겠다”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이익(win-win)이

되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 대행은 “우리의 산업 역량, 금융 발전, 문화, 성장, 부는 미국의 도움 덕분에”이라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와 기술 이전,투자, 안보 보장 등이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우 편리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과 28분간의 ‘좋은’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며, 한국이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를 포함해 무역 흑자 축소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백지화는 도민 농락”

전남도의회 박형대(진보당·장흥 1) 의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백지화 방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증원하지 않고 3058명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곧 1년이 넘도록 의료 공백을 참고 기다려온 국민들과 의대 신실을 염원해 왔던 전남 도민을 배신하고 의료개혁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규탄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번 증원 포기가 2026년에만 해당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고, 이로 인한 의사

인력과 지역 간 의료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모든 정치권과 대통령 후보들은 의료 개혁을 위해 의대 증원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남도도 2026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약속했던 만큼 정부 발표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의료개혁이 또 다시 좌절될 위기에 처한 지금, 정치권 모두 국민 건강권 보장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요구했다.

/김호 기자



대선승리를 다짐하며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들과 당 지도부가 지난 1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총청권 합동연설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발달·정신장애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이재명 “맞춤형 서비스 원스톱체계 구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0일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장애인의 날인 이날 장애인 정책을 발표하며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당사자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장애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 곳곳의 장벽을 정비하여 장애로 인한 차별이 없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받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특별교통수단 확충, 돌봄서비스 강화, 차별 없는 교육 환경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이 이 후보는 “장애인의 일상 생활 지원을 늘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해 일가족의 삶이 서서히 누그러지는 바극을 막겠다”고 했다.

그는 “AI·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형 장애인 지원 체계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며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서로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뉴스

“자치분권 강화·재정분권 실현해야”

국민주권전국회의 광주전남본부 토론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지난 18일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속에서 지방의 자율성과 시민의 직접 참여가 제한적”이라며 “조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주권재민 가치를 실현할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국민주권전국회의의 광주전남본부(상임대표 최영호)의 ‘국민 주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신 의원은 국민주권전국회의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신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제 도는 재정 분권이 미흡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약 50%에 불과하다”며 “중요 정책 결정권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고 지방의회는 제한된 역할로 집행부 견제 기능이 약하다”고 진단했다.

신 의원은 “2004년 주민투표 제도 시행 이후 실시된 주민투표 건수는 12건에 불과하는 등 시민 참여가

낮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 역량과 경험의 격차도 존재한다”고 지방자치 분권의 사회적 측면을 분석했다.

신 의원은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한 자치분권 강화로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지방의 회와 주민자치제도를 법적으로 강화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전략을 짜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의표 국민주권전국회의 상임집행위원장은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 독식과 지배적 양당제를 고착시키고 있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연동형 비례제에 기반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광역 시도당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 식구 감싸기계를 완전히 차단하도록 당의 윤리심사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과 국민주권전국회의의 광주·전남본부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도기 기자

민주 후보들, 울산서 두번째 영남 경선

영남권 합동연설회서 힘차 민심 구애 나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이 20일 경북 울산에서 열린 두 번째 순회 경선에서 정권 발표를 통해 ‘힘차 민심 공략’에 나섰다.

경북 안동이 고향인 이재명 후보와 경남 고성에서 태어난 김경수 후보는 “영남의 아들”이라고 강조했고, 김동연 후보는 대선 후보의 자질과 역량을 앞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의 제21대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경북 안동이 낳고 길러 주신 영남의 아들”이라고 본인을 소개하며 “동토에서 독립운동하듯 민주당을 지켜온 여러분이 바로 민주당의 든든한 뿌리”라고 영남 당원들을 치켜세웠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부각하며 정권 심판론도 내걸었다.

경남지사를 지낸 김경수 후보는 경상도와의 인연을 재차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저는 경남에서 두 번 낙선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일이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계란이 되어야 했다”며 “그것이 노무현의 마음이고, 저 김경수의 마음이고, 여기 계신 영남권 당원동지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는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그는 “1998년 IMF의 환 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경제위기까지 매번 위기의 한복판에서 해법을 찾았다”며 “분명히 약속드린다. 경제위기와 싸워 이기겠다”고 밝혔다.

“섬 요양원 행정처분, 주민 피해도 살피야”

섬 지역 소규모 요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철우(민주당·원도1) 의원이 최근 기획조정실 주경 심사에서 “섬은 요양시설이 매우 부족해 한 곳이라도 문을 닫게 되면 입소자들이 당장 갈 곳을 잃게 된다”며 “요양원의 실수나 일탈로 무고한 주민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심판 단계부터 지역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해당 비용은 전액 환수되며, 요양기관에는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 시에는 시설운영이 중단되면서 입소자들이 돌봄공백에 놓이는 등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부정 수급에는 엄정 대응하되,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입소자와 가족들에 대한 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전남도가 제도와 현장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